

# 국방부 2개 군과 접촉...전남도는 뒷짐, 광주시만 분주

## 무안군 공식 반대 천명...흔들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해 김산 무안군수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전남의 상생 사업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협의했지만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장의 공개 반대 움직임에 시·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올해 안에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 단체장의 공개 반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국방부가 시간을 끌지 말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서둘러 발표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여론도 높다. 자칫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 내년으로 미뤄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 '정치적 판단'에 따라 찬·반 움직임을 갈릴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주민의 뜻을 묻자는 것이다.

광주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군공항이전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개발에 따른 이주 대책, 사업 계획, 주민과의 소통 문제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중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허익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광주시의회 김익주·정무창 의원, 교통, 공항, 도시계획 부

야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7명이 추가로 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갈등 영향분석 용역'에도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후보지 실태조사, 이해 당사자의 견 수렴, 주요 쟁점별 갈등요소 파악 및 해결방안 분석,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도출 등을 수행한다.

또 광주시는 이전 후보지 선정에 앞서 여러 문제점과 갈등요소를 미리 점검하

## 2개 군 지역민 반발 협의 못해 시 자문위 회의·영향 용역 착수 의회·단체장 공개 반대에 곤혹

고, 후보지가 선정되면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시가 이전 후보지로 추천한 영암, 무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작전성,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큰 2개 군과

는 협의를 전혀 하지 못했고, 나머지 2개 군과는 집중적인 협력이 이뤄졌다.

또, 일부 지역민들은 되레 군공항 이전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협의 과정에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무안군에서는 의회 차원의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를 비롯해 군 공항이전 추진 중인 대구와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군 공항 이전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양 지역의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을 공동협력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에 협력하겠지만,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으니 전남도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구·수원 등 3개 도시 시민단체가 결성한 '군 공항이전 시민연대'는 오는 20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조속한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8일 오전 광주시청 3층 협의회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흑산공항 건설 반대 환경장관 찍어내려 감찰”... 설득력 없다

## 청와대 특검감찰반원 주장

## 장관 반대 입장 이미 밝혀

## 여야, 의혹 제기 놓고 대립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사찰 주장 파문이 흑산공항 건설에까지 번지고 있다.

김 수사관은 환경부가 지난 9월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장관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당시 장관으로부터 '빨리(김 장관을) 잘라야 하니 특이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폐비닐 쓰레기 대란 사태의 책임과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청와대가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해 감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측에서는 “폐비닐 쓰레기 대란 당시 환경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가 됐다”며 “특검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해 보고한 사안이다.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전혀 아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도 집중 보도했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임의로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즉시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검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유전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을 겨냥해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특검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던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 없고 진실을 밝혀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특검반을 무력화했다. 특검반은 이제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마련하라”

## 산업·농축산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 제조업 강국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우리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 위상을 지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빠진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도약을 주문했다. 그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과 폭염 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등 현안에 대처했지만,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 노력엔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고속도로에서**  
**신의 한수**

피곤할 때 졸음쉼터에서 한숨 자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깜빡 졸음이 깜빡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피곤할 때는 졸음쉼터를 찾아주세요. 잠깐의 휴식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킵니다.

**전국 212곳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졸음쉼터 설치 후, 한해 고속도로 사고 건수 7% 이상 감소 / 사망자 수 32% 이상 감소 (2016년 말 기준)

ex 한국도로공사